

고두갑·김해룡·이정선, 통합교육감 단일화 합의

여론조사 100% 방식...내주 단일후보 발표 예정 조직개편·예산·인사 등 공동정부 운영 구상 담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 구도가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에 요동치고 있다.

고두갑(목포대 교수)·김해룡(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선(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3명은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결정할 뒤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에 따르면 단일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개 기관이 실

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다. 조사 표본은 1000명 규모로, 광주 440명·전남 560명이 배분된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이며 성별·연령·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한다. 두 기관의 조사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합산한 뒤 평균을 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한다.

조사는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표본이 부족할 경우 마지막 날은 오후 10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차범위 내 접점 결과가 나



고두갑(목포대 교수)·김해룡(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정선(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3명은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후보 선출을 전격 발표했다.

오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세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상호 비방이나 흑색선전,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이들은 특히 “이번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후보는 시도민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당선 이후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단일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동정부 성격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개편과 예산 방향, 중장기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감 직속 상설 자문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고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포함됐다.

이번 3자 단일화 합의로 전남·광주 통합교육감 선거는 당초 8명이던 예비후보가 5명 안팎으로 압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장관호(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정성홍(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예비후보가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추진을 선언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결정하고, ‘통합 공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정책과 선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외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강숙영 전남도교육청 장학관도 이날 단독 기자회견을 열어 ‘5·4·3 학제 개편’ 등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평가에서는 향후 강숙영, 최대우(전 한국교총 부회장) 예비후보 등 3자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구도가 3자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5·18 헌법 수록 투표 제안” 이정현, 자율적 판단 강조

국민의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는 21일 “오래전부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해 왔다”며 “(개헌) 국회 표결에 있어 자율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인인 국회 표결 자유투표 제안에 대한 공개 질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특정 방향으로 돌아가기보다 의원 각자의 양심과 역사 인식이 따른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현 예비후보는 “표결은 자유롭게, 판단은 양심에 따라, 결론은 국민 통합으로, 역사를 헌법에 담는 일은 과거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가기 위한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학·과학 기본 세워 AI 인재양성 해야” 김대중 통합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학력 신장 공약 발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사진)가 수학·과학 기초학력 강화를 통한 AI 인재 양성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21일 “수학·과학 교육의 기본을 세우고, 배움이 곧 미래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며 AI 시대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학력 신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수학·과학 기초를 강화하는 동시에 문제해결력과 탐구역량을 키워,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AI·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전남·광주가 미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교육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공약은 △수학·과학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권역별 공동교육 거점센터 및 공유학교 운영 △AI·데이터 연계 탐구·연구 프로그램 확대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보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해소한다. AI 기반 진단 도구와 교사 상담을 결합한 1대1 학습 처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 수학·과학 공동교육 거점센터와 공유학교를 운영해 실험·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이들 거점은 학교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형 플랫폼으로 구축되며, 방과 후와 주말, 방학 기간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도 제공된다. 학생이 직접 수업과 실험을 제안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AI·데이터 기반 탐구·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이 지역사와 산업 현안을 주제로 프로젝트형 연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교수와 전문가, 기업 실무자가 함께하는 협업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수학·과학이 더 이상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이해하고 탐구하는 즐거운 과정이 되도록 교육을 개편하겠다”며 “초등학교부터 개념과 원리를 경험 중심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AI·데이터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 자치구 기초의원 선거구·정수 재조정

공직선거법 개정...96개 동 20곳 명칭 변경·정원 재배분 기존 68명서 73명으로 5명 ↑...24일 조례안 심의·의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광주 자치구 기초의원 선거구가 재조정되고 정수도 늘어나게 됐다.

21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남회의를 열어 광주 자치구의원 정수배분과 지역 선거구획정안을 조정했다.

획정위는 인구와 동수 기준에 따라 남구, 광산구 일부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안을 지난해 12월 의결했으나 지난 17일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정수 등이 변경되면서 재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 96개 동 선거구 20곳의 자치구의원 정수는 기존 68명에서 73명으로 5명 늘었다.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 의원 정수가 1~2명

늘었다.

지역별 동수 7명(지역구 6명·비례 1명), 서구 14명(지역구 12명·비례 2명), 남구 12명(지역구 10명·비례 2명), 북구 21명(지역구 18명·비례 3명), 광산구 19명(지역구 17명·비례 2명)으로 조정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선거구 명칭도 변경됐다.

북구 라는 북구 바(용봉·삼가·일곡·매곡)로, 북구 마는 북구 라(운암 1·2·3·동림), 북구 바는 북구 마(건국·양산·신용)로 바뀌었다. 광산구 라는 광산구 마(신창·신가)로, 광산구 마는 광산구 라(수안·하남·임곡)로 조정됐다.

의원 정수도 인구 60%, 동수 40% 비율로 선거구별로 조정됐다.

재배분 결과 서구 다(화정3 4·풍암) 2인→3인, 남구 나(봉선2·진월·효덕·송암·대촌) 3인→4인, 광산구 나(신흥·우산·월곡1·2·운남) 3인→4인, 광산구 라(수안·하남·임곡) 3인→4인, 광산구 마(신가·신창) 3인→2인, 북구 비례 2인→3인 등으로 변경됐다.

앞선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으로 1석을 추가 배정받았던 하남·임곡 권역 선거구는 이번 개편에서도 명칭만 변경됐을 뿐 추가 1석이 유지되며 4인 선거구를 유지했다.

광산구 마선거구는 비어동 조정 영향으로 1명이 감소했다.

광주시의회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대로 오는 24일 임시회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강진원, 복당 안돼” 탈당·복당 반복 행보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1일 강진군 수 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진원 예비후보를 향해 “복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경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칙을 버리고 당을 떠난 정치, 민주당에 다시 설 자리는 없다”며 “강진원 예비후보 복당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강 예비후보가 탈당 이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당선 뒤 복당 가능성까지 거론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전남도당은 강 예비후보의 정치 행보를 겨냥해 탈당과 복당, 무소속 출마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2016년 탈당에 이어 2022년 공천 취소 이후 탈당과 무소속 출마, 올해 다시 정계에 당내 후보 등록이 어려워져 탈당을 선택한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개인 유불리에 따른 선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복당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당의 원칙을 거부하고 탈당한 순간 그 책임 또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지혜,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본소득당 호남 공략...“진보정치 쇄빙선 될 터”

기본소득당 전 대표를 역임한 신지혜 최고위원(사진)이 광주 광산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신 최고위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광산구를 보궐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선거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미래를 여는 선거”라며 “행정통합을 선도하고 AI 대전환을 준비해온 기본소득당이 통합특별시장 성공을 이끄는 진보정치의



대응 전략과 목표를 발표한 뒤 같은 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의 변과 주요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 기자회견에는 유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문현철·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장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집중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용 대표는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4월 한 달간 호남 전역을 순회 중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혁신당 광주시당, 중대선거구 개편 비판

“민주당 의석 싸움이 수단으로 전략”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4인 중대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중대선거구 대상 지역에 ‘매자부활전’ 방식까지 동원하며 4인 선거구에 전원을 공천하겠다는 것은 중대선거구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처사는 소수 정치세력의 진입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제도를 기득권 공화기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졸속 개편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의석 싸움이 수단으로 전략했다”며 “정치제도 개편이 현직 국회의원들의 세 과시 수단으로 변질 되서는 안된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양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성 없는 민주당의 행태는 행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스스로 포기하



겠다는 선언과 다른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중대선거구와 관련해 민주당에 △4인 선거구 전원 공천 방침 철회 △복수 후보 추천 금지로 의석 독점 구조 차단 △소수 정당 의회 진입 제도적 보장 장치 마련 △시민사회와의 전면적 공문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당은 “이번 선거구 개편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만이 아닌 실질적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선택할지, 기득권을 선택할지 시민들이 엄중히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